

이재명 “경제성장률 3% 달성엔 ‘긴축’ 아닌 ‘확장재정’ 필요”

민생경제 기자회견

韓 12개월 연속 수출감소 현상 직면 무역수지 적자… 208개국 중 200위
尹 정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 R&D·신성장 동력 발굴 등 투자와 가계 대한 적극적 재정 지원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경제성장률 3%대 회복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민생경제 지원 제도를 제안했다.

경제성장률은 실질국내총생산(GDP)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말하는데, 한 나라의 경제 규모(국민소득 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다. 대한민국이 3%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3.2%를 기록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에도 4.3%의 성장을 했지만 직전연도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국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입은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국경제가 위기의 늪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가 일상이 됐고 대출이자 갚기도 벅거워, 국민은 아예 지갑을 닫고 있다”며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은 존폐 위기에 처했다. 실질소득도 감소하고 투

자도 소비도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라는 현상에 직면했다. 올해 상반기 35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세계 5위권의 수출모범생이 208개국 중 200위로 황당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

한 이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면서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면서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 매라’고 한다. 허리띠 졸라 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쌍끌이 엔진을 ‘연구기술 개발·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꼽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을 언급하면서 첨단산업 연구 개발 지원, 벤처·스타트업 정부 지원, 재생에너지 예산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아직 국가 부채 수준은 여력이

남아있다면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 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재정 지출 확대의 시급함을 강조한 이 대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항 의무화 ▲내수 확대를 위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민관협력 이자부담 3조원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 신설 ▲청년 교통비 부담 줄이는 ‘청년 3만원 패스’ 도입 ▲전세사기 보완입법 정기국회 추진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확장재정에 대해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 “경제 현상이라는 것이 매우 복잡적이다. 정부의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일면론만 맞는 데, 어느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출 하나에 따라서 그 영향이 전혀 다를 수 있다”며 “경기 불황기에는 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활황기에 성과를 낸다. 빛이 나쁘다는 일반적 고정관념을 일상적으로 관찰하면 유능한 경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기현 “혁신위 화합 제안 존중”… 징계취소 의결·서울편입 특위 출범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 위원회 김포 유사도시도 원하면 적극 검토 친윤 인사 위주 공천… “결과로 평가”

국민의힘이 2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1호 안건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안을 의결했다. 또한, 최근 국민의힘이 띄우고 있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당 대표 직속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는 1호 안건으로 당내 화합을 제시했다. 과거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은 나름 합리적 사안과 기준을 통해 이뤄져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혁신위의 제안도 존중돼야 마땅하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의 진정성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징계처분 취소대상자들은 이준석 전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표, 홍준표 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이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판,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

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며 당원권 정지 1년,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에 연관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징계 취소 의결을 알리며 “최고위는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기 위한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 위원회(가칭)’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5선 중진 조정태 의원을 임명했다.

김 대표는 “주민을 위해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을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들의 생활권, 통근권, 통학권 그리고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행정 이기주의가 가로막

았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특위를 발족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서울 인근의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오시면 당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인 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향후 위원 구성은 위원장이 지도부와 협의해서 구성을 할 것이고 원내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이철규 전 당 사무총장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인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직 사무총장으로 인재영입 활동이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등을 감안했다”며 “향후 위원장이

상의해서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사무총장은 강서구청장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친윤계 인사 위주로 공천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여러가지를 감안했다. 인재영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활동은 별개이기 때문에 결과로 평가받겠다”며 “이 전 사무총장도 활동하면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인재영입위원장 인선에 대해 김용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윤심 100%’ 인사만 영입하고 당의 개혁을 바라는 인물은 승선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혁신위는 통합을 외치면서 인재영입은 친윤감별사에 맡긴다면 둘 중 하나는 거짓이란 뜻”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태홍 기자

尹 “지역,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아야… 교육·의료 발전 핵심”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된다”고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면서 각 지역의 노력을 요구했다.

이어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힘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접근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과 의료,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교육발전특구 공청회가 열린다면서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통합위, 청년·미래 ‘국민통합 토크쇼’

김한길 “청년 위한 사다리 견고히 할 것”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가 2일 ‘2023 국민통합 토크쇼’를 개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바라는 희망과 공정의 사다리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통합위가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 소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청년과 미래를 주제로 토크쇼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청년들이 겪는 일자리, 주거 문제, 진로불안 등의 어려움을 유난이라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1부 컨퍼런스는 다변화하는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 인식과 이에 따른 발전적 대안으로, 청년이 국민통합의 중심이 되어 통합의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한 역할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행사엔 각계 각층의 청년 대표들과 통합위 청년마당 위원 및 2030 청년자문단 등이 참여했다. /서예진 기자